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시한 '15일→7일이내' 단축

주요경제지표	
주가	종합지수 2,035.98P(+8.74P) ↑
코스닥	지수 611.09P(+8.01P) ↑
환율	1달러 1,167.0원(-1.2원) ↓
금리	3년 만기회사채 2.15%P(-0.05P) ↓

하도급거래 법률 개정안 발의  
업계 "비용 부담-경영난 초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현행보다 최대 절반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발의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건설단체는 건설사

의 97%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15일인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공휴일도 포함된 것으로 기한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자들이 행정부담 및 비용이 증가해 경영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15일도 짧는데 기한을 7일로 줄이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설사들도 부득이한 경우에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현재 건설하도급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다수의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위윤기자

## “투자가치 높은 아파트” 브랜드조사 ‘래미안’ 1위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아파트 브랜드 조사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114는 전국 1,509명을 대상으로 '2016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대상 삼성물산 '래미안' △선호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주거만족도 포스코건설 '더샵' △인지도 GS건설 '자이' △소비자신뢰도 롯데건설 '롯데캐슬'이 각각 선정됐다.

부동산114의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대상 선정방식은 브랜드선호도 및 상기도, 건설사상기도, 투자가치, 신뢰도, 주거만족도 등 6개 부분의 응답률에 가점을 적용해 합산한 것이다.

삼성물산 '래미안',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포스코건설 '더샵', GS건설 '자이', 롯데건설 '롯데캐슬' 브랜드가 응답률 27.6%로 높아져 종합대상 5위 안에 들었

다. 이 밖에 건축 부문 시공능력평가 11~50위까지 종건 건설사들도 선전하며 종합대상 10위권 안에 들었다.

시공능력평가 13위인 호반건설 '베르디움'과 12위인 한화건설 '꿈에그린'은 '2016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 순위에서 각각 8, 9위를 기록했다.

삼성물산 래미안은 '투자가치(24.5%)'와 '브랜드상기도(20%)' 등 두 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종합대상 1위에 오른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투자가치' 응답률의 2위와의 점수 격차가 8.6%포인트로 6개 지표 중 가장 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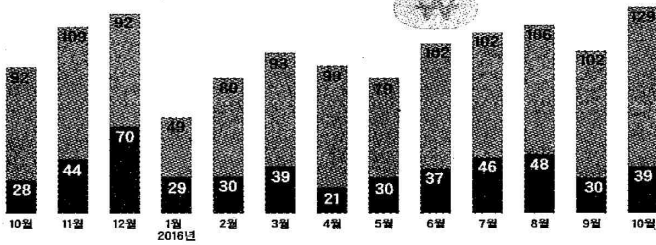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 브랜드 순위는 2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15.9%)', 3위 GS건설 '자이(15.4%)'가 차지했다.

브랜드를 알게 되는 경로 중 '경분주택'이나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서라고 답한 응답률이 커지고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한 브랜드를 인지한다'는 응답률은 2015년 20.1%에서 27.6%로 커졌다. 히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 2016.12.14(수) 건설경제 】

월별 수주 실적 추이 (단위: 천억원) ■ 민간 ■ 공공



## 10월 국내건설수주 15.8兆... 작년보다 40%↑

10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15조81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주액인 13조2507억원보다는 26.9%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0월 국내건설 수주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10월 국내건설수주액을 발주부문별·공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수주액은 3조88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0% 증가했다.

공종별로 토목은 항만, 도로, 댐 등의 공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4% 늘었다. △육상 사동항 2단계 집안시설 축조공사 △한림~생림 간 도로건설 공사 등이 주요 수주 공사로 꼽혔다.

건축은 학교·관광서 등 업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2.1% 감소했

다. 주요공사로는 △일광지구 5·6BL 민간 참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수원고지 검침사 위탁개발사업 건축공사 등이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12조931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5% 늘었다.

공종별로 토목은 산업단지조성, 민자도로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했다. △경주 김단 일만산업단지 조성사업 △e편한세상 영통 2차 도시계획시설 공사 등을 수주한 결과다.

건축은 주거용 건축물 및 업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1% 늘었다. 주요공사는 △년촌주공재건축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축공사 등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10월 수주실적은 공공부문은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발주 확대로 토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석기자 ysys@

#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차단되나

하도급대금의 대물 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 파산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사업자 측은 원사업자에게만 대물변제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급사업자 측은 대물변제는 현금 유동화에 어려움이 많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원사업자 파산 등 제한적 허용' 하도급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계류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제원의 원동 16명이 지난 7월 발의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금지하되, 원사업자 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몰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대물변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몰뚝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속내와 달리 대물변제를 원하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합법적인 대물변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장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하도록 해

수급사업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는 공공과 민간공사에서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원사업자에게만 대물변제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공 중 발주자의 파산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대물변제 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합업계 관계자는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모두 인정하는 대물변제를 원사업자 파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제3의 채권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또 시공과정 상황이 바뀌면 현금과 대물 등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대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자는 자기 돈을 들여 시공한 뒤 기성금을 받는데 대물을 받으면 현금 유동화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대물변제를 약속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있는 한 대물변제 조건을 원사업자 파산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